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전남 서남권 성장동력이 될 J프로젝트는 최근 개발계획 심의가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농림부 '간척지 활용' 지루한 샅바 싸움

해남과 영암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레저도시로 만들기 위한 J프로젝트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J프로젝트 예정지구내에 22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최근엔 간척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전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농민 여론과 개발 사이 딜레마

■ 농지 활용 싸고 이견

J프로젝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해남지역 간척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지역민,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쟁의 불씨가 된 된 해남군 산이면 일대 25㎢(620만 평)의 간척지를 놓고 전남도는 'J프로젝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만큼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농림부는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농민들에게 땅을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농림부와 농촌공사가 해남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간척지를 농지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해남지역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황산면, 영암군 삼호읍 일대 총 87.92㎢(간척지 73.6㎢)에 3조3천억원을 투입·개발한다는 J프로젝트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셈이다.

전남도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J프로젝트가 간척지 활용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와 농촌공사, 그리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 안을 상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가만히 있던 농림부가 뒤늦게 개발계획 승인과정에 뛰어들어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J프로젝트를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개 SPC 중 일부 '재검토' 돌아서

■ 경기침체 투자자 주춤

J프로젝트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금융위기로 촉발된 급격한 경기침체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 SPC(전담법인)가 구성되지 않은 송촌지구를 제외하고, J프로젝트에 투자키로 한 5개 SPC 참여기업 가운데 일부가 경기불황과 자금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 사업참여 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연말에 갑자기 불어닥친 불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SPC참여기업들 가운데 일부 자금력이 취약한 업체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개발 사업 대부분 중복 최대 걸림돌

■ 새만금과 관계는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전북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이 J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39%를 산업·관광·에너지 등 비농업분야에, 30%는 농업에, 나머지 27%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남겨두기로 결정한 정부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71.6%였던 농업용지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 것으로, 세부 개발과정에서 상당부분이 J프로젝트 구상과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위 심의 통과에 전력 투구

■ 향후 대책은

전남도는 J프로젝트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우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심의안을 상정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삼호·구성·초송 등 3개 지구에 대한 심의가 간척지 활용 등의 문제로 1년여 동안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자 삼포와 부동 등 당초 지난 8월로 예정됐던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신청은 보류해 둔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李 대통령-시·도지사 회동 무산

靑 전격 취소 … 내달 2일 계획
"지방 목소리 봉쇄" 논란 예상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이 무산됐다.

당초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만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11일 이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는 27일 정부 차원의 지방발전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다음달 2일께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발전 대책으로 비수도권의 반발을 어느정도 잠재운 이후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발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가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스스로 봉쇄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 발전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수도권의 반발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동 무산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하루 전에야 확인하는 등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지난 10일 저녁만 해도 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이 확정된 것으로 알았으나 이날 다시 확인한 결과, 12일 일정에는 빠져 있었다"며 "12일 회동은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 논의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와의 회동이 최종 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동 무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날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기 보다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이 무산된 것은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격렬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12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규탄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같은 날 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의 회동이 이뤄진다면 자칫 '물타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제 위기 극복 정책"

李 대통령 발언에 비수도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정치 논리로 풀면 안 된다' 는 입장을 밝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등'이 조기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반대 여론을 '정치 논리'로 규정,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일·영 3개 신문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지방을 희생시켜서 수도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강화 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선도 산업으로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서 밀어주겠다고 먼저 발표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킨 점과 ▲경제 살리기 예산의 90%가 지방에 투자되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비수도권과 야당의 반발과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정치로 풀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정치 논리로 가면 100년 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비수도권 및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반대 여론을 정치 논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만한 국정 운영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